■ 대치정국 일단 소강국면… 여야 전략은

직권상정 명분쌓기 vs 결사항전 결의 다져

與 고용 현장 돌며 여론전 강화해 야 압박

野 신방겸영 금지 골격… 직권상정 무력화

국회 문방위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발언을 하기에 앞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법 개정 및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국면이 일주일 정도의 소강기를 맞을 전망이다.

그러나 양측은 단 한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른 국회 파행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과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소강기 동안 직권상정의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고 민주당은 직권상정시 결사항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히려 15일 이후 대충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지연작전에 무한정 끌려 다닐 수 없다"며 "만약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원천 봉쇄할 경우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대비,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 공문까지 보내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여론전도 강화하고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서울관악종합고용센터에서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한 최고위원 현장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며 "비정규직 실업사태를 애써 외면하려는 정치세력이 있어 통탄할 일"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 대표는 이어 "오늘 우리는 한번 더 비정규직을 구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고용 현장에 와 고통을 들어본 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을 당정간에 협의, 신속하게 할 일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최대 뇌관인 미디어법 대안을 마련, 대응에 나섰다. 대안을 고리로 미디어법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유도,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추진 방침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민주당의 대안은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을 유지하되, 비보도 종합 편성채널(준종편)에 한해 지분 소유를 허용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법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에 기대 여론전을 통해 직권상정 쪽으로 흐르는 듯한 현 기류를 차단, 6월 국회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시간 끌기' 차원의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시장 출마 시민 뜻 따르겠다"

강운태 의원 민주 복당 소감 밝혀

민주당 복당 후 첫 지역 행보로 9일 광주시청을 찾은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사진)은 "광주시장 출마는 내년에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 후보 하마평 때마다 거론돼 이제는 '상수'(常數)가 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시청 내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마여부의 관건으로 일단 '민심'을 내세웠다.

강 의원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라면서 "그러나 시민들이 (광주시장 선거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내년에 시민의 뜻, 민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탈당과 복당 등 갈지자 행보에 대해 "탈당도 정치적 소신이다. 권력을 좇아 탈당을 했다면 비난을 받아야 하지만 자신은 참여정부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한 것으로 철새 행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광주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야 하고 시정도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많다. 예를 들어 광주가 GRDP(지역내 총생산) 5위에서 7위로 밀려났는데 이를 5위로, 4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쇄신이고 변화"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최근 벌어진 세계김치연구소 유치 주도 논란과 관련해 "박광태 시장의 인격으로 봐서 그런 말을 했을 리 없다.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이 뛰는 것은 책무"라고 되받으면서 "박 시장도 앞으로 잘해 민심을 얻으면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강 의원은 자신의 복당을 반대했던 이윤정 광주 남구지역위원장 등과의 갈등에 대해 "복당에 반대했던 분들과 손잡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조직을 관할하는 것(지역위원장을 맡는 것)이 정치 순리이자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민주·개혁세력을 통합하고, MB악법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중산·서민층의 정당으로서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 의석 84석으로

비례 정국교 의원직 상실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비례대표)이 9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발탁당하면서 민주당이 현 85석에서 84석으로 한 석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사퇴할 경우 후순위자로 승계되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들어 민주당의 의원직 상실 사례는 김세웅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정 의원은 당초 지난 1월 당에 사퇴 의사를 표명, 차기 순번(17번)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후 결백을 주장하며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의원직 승계는 일단 무산됐다.

민주당은 가뜩이나 수적 열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1석을 잃게 되자 당혹해 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 후보의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후순위 후보인 김진애씨와 함께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치앤티(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치솟자 지분을 처분해 약 4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125억원 상당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총선 직후인 지난해 4월22일 구속기소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충청권 연대론' 다시 고개

昌 가능성 언급 … 선진당 입각 주목

국회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연대 즉 '충청권 연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여의도 정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이 시도되면서 보수-우익의 결집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 형성에는 이날 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도 한 몫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이승열의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충청 인사 총리 기용설'에 대해 "그저 한두 사람 빼가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자유선진당으로서 별로 유쾌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정치 구조적으로 특정정책 목표나 정치상황에서 연대공조를 하기로 한다든가 한다면 그런 틀 위에서 총리나 장관을 하는 것은 좋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을 처리키로 최근 의견을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세종시법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한나라당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선진당도 한나라당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충청연대론의 성사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각에서 선진당 소속 인사나 충청권 인사의 중용 여부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사이버테러' 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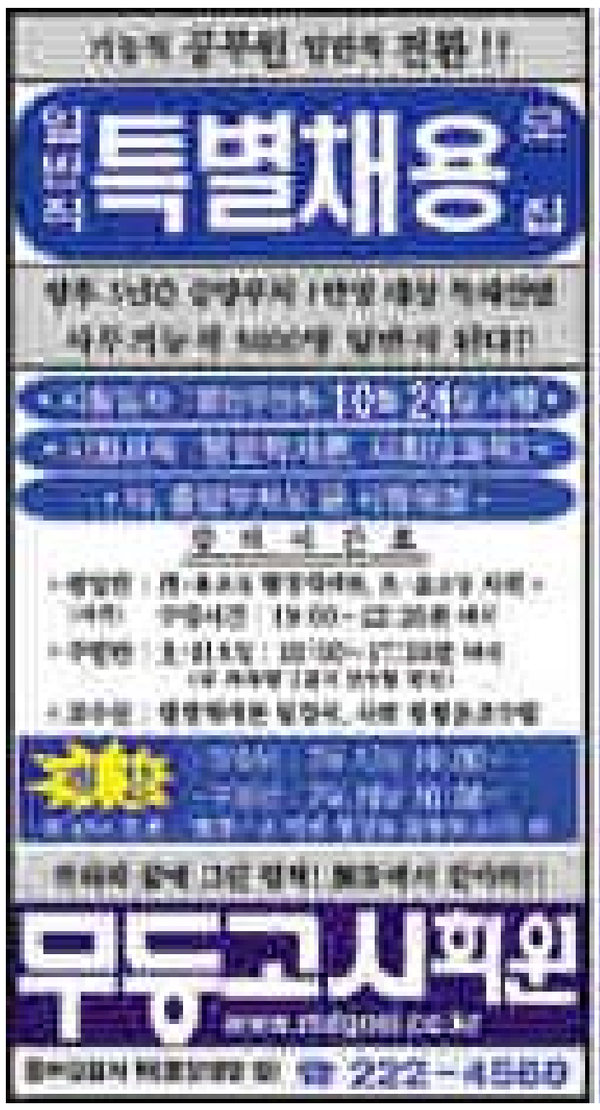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한 한미 주요 사이트 해킹 사건이 여야 간 정쟁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처리를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사이버 북풍'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한나라당 미래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기에 정치공세를 하는 야당에 연민을 느낀다"며 "민주당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북한 및 종북 세력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이버 공격은 북한 등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 추정설을 제시해 사이버 북풍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야지 성급한 추정 발표를 하는 것은 의심 가는 바가 많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